# 지방선거 벌써 과열조짐…예비 후보자 대상 흑색선전 난무

출마 예상 후보 비방 메시지 보내고 현수막 게시…경찰 수사 3선 출마 공식화한 김영록 전남지사 향해 '불출마설' 유포도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 6회 전국동시지방선 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선거전이 과열 조짐을 보

출마가 예상되는 후보를 비방하는 문자 메시지를 퍼트리는가하면 불출마 설을 제기하고 깎아내리는 등 '마타도어'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급기야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지경이 됐다.

16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이철(민주·완도1) 도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가짜뉴스와 허위 사실, 네거티브에 신속하고 강하게 대응할 것"이 라고 밝혔다. 재선으로 완도를 지역구로 두고 현 재 부의장을 맡고 있는 이철 도의원은 내년도 지방 선거에서 완도군수 출마를 계획하고 있다.

이 의원은 "자신이 비위 행위로 압수수색를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문자 메시지가 유포되고 있다"며 "문자를 유포한 A도의원 배우자를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고,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10일 모 언론을 경찰에 명예훼 손으로 고소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이 의원은 "2년 전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보도로 전남도 감사, 경찰 수사 등을 받았고 모두 무혐의 를 받았다"며 "내 주장이 거짓일 경우 정치판을 떠 나겠다"고도 했다.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불출마 설도 나돌고 있다. 사실상 출마를 계획하고 있는 후보자임에도 적절하지 않는 이유 등을 들어 불출마 설을 지역정가에 유포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최근 전남도 안팎에서는 김영록 전남도지 사의 3선 불출마 설이 지역 정가를 중심으로 나돌 아다

소문은 '김 지사가 국무총리 선임을 염두해두고

있어, 내년도 지방선거에는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김 지사와 대결이 예상되는 후보군 측이 흘린 내용일 것이라는 게 지역 정가의 분

김 지사는 최근 민선 8기 3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3선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했으며, 내년 선거를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전남은 AI 데이터센터, RE100 산업단지, 전남 국립의대 등 현안 사업이 새 정부 출범 이후 탄력을 받으면서, 전남도는 물론 지역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하는 시점이지만, 후보들 간 물밑 경 쟁이 과열되면서 잘못된 정보로 도민 혼란을 부추 기는 건 부절적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에서는 김병내 남구청장을 겨낭한 불법 현수막이 게시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현수막에는 "우리 남구는 '병'이 아닌 '용'이 필요하다"는 문구가 적혔는데, '병'은 김병내 현 구청장을, '용'은 내년 선거에서 남구청장 출마가 예상되는한 인물을 암시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경찰은 현수막 게시와 관련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명예훼손 여부와 또다른 불법성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8 년 치러한 제 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홈페이지 게시판과 문제 메시지를 통해 상대 후보자를 비방 한 후보자 및 선거 관계자 3명이 적발돼 경고 또는 수사의뢰 처분을 받았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경생 상대를 헐뜯고 비방하는 후진적 정치풍토는 사라져야 한다"며 "후보자들이 정책과 공약을 외면하고 네거티브에만 매달린다면 시민들의 피로감과 반발은 더욱 커질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휘영 문체부 장관, 황만순 한국투자파트너스 대표, 이재명 대통령, 이한경 에코앤파트너스 대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이 대통령 "일단 돼…규제 패러다임 바꿔야"

바이오·에너지·문화 산업 규제 정책 개선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정부의 규제 정책 개선을

이날 '규제에서 성장으로'라는 제목으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에서는 바이오·에너지·문화 산업과 관련한 규제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지금은 정부가 규제기 관에서 탈피해 신산업 지원의 중심 기관으로 역할 을 바꿀 시점"이라며 "경제 성장 촉진에 있어 정부 가 동반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제 패러다임의 전 면적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실장은 우선 바이오산업에 있어서는 "미국은 신약 허가제를 통해 희귀·중증 질환 치료제 개발 초기 단계부터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며 "반면 한 국은 연구개발(R&D) 투자 부족에 더해 복잡한 인허가 제도 등 해결할 과제가 많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은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다. 공무원이 미리 답을 정해놓고서 '이건 안 돼'라고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바꿔야 한다. 규제를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 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서, 금지해야 하는 것만 아 니면 웬만큼 다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 다"며 "무조건 '일단 안 돼'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일 단 돼'라는 쪽으로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고 주문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정부합동대응팀, 캄보디아 프놈펜 도착

#### 한국인 납치・감금 범죄 대응

정부 합동 대응팀이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 범 죄 대응을 위해 15일(현지시간) 캄보디아에 도착 했다. 〈관련기사 6면〉

단장인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프놈펜 남쪽 테 초국제공항으로 입국했으며, 박성주 국가수사본 부장과 경찰청·법무부·국정원 관계자들이 동행했 다.

김 2차관은 "베트남 접경 지역 30대 여성 사망 사건이 보도됐다"며 양국 수사 공조를 적극 요청 하겠다고 밝혔다.

전세기 투입 여부는 "준비 중이나 미확정"이라고 했다.

대응팀은 현지 단속으로 구금된 한국인 61명의

송환을 우선 협의하며, 체포영장 발부자부터 신속 송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부가 잔류 의사를 밝혀 속도는 불투명하다.

정부는 항공편을 준비 중이며 주말 내 송환을 목 표로 한다. 앞서 63명 중 2명은 전날 국적기로 먼 저 귀국했다.

대응팀은 '한국인 대학생 고문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협조와 공동부검·시신 운구 절차도 논의한다.

김 2차관은 16일부터 캄보디아 외교부·내무부·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를 잇달아 방문할 계획이 다.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신고는 2021년 4건, 2022년 1건에서 2023년 17건, 지난해 220건 으로 급증했고 올해 8월까지 330건에 달했다.

/연합뉴스

#### 트럼프 APEC 방한 29~30일 유력…한미 정상회담 조율

위성락 안보실장 밝혀 "김정은 위원장과 만남 가능성 그런 움직임 알고 있지 않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 방한 일정과관련해 "29일에 도착해 30일까지 머무를 것으로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 정상회담도 이 기간에 열릴 것으

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변동 가능성도 있어 아직 일정을 확 정적으로 소개하기는 이르다"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 장과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에 대해선 "미국과 북한 사이의 일이라 알 수 없다. 그런 움직임을 알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미중 정상회담 전망과 관련해선 "이뤄진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체류 기간에 있을 수 있겠 으나, 그 이상의 구체적 언급은 어렵다"고 말했 다.

대통령실은 의제에 대해 동맹 강화, 확장억제,

경제안보 협력 등이 논의될 수 있다며 경호·의전 등 실무 준비를 병행 중이라고 전했다.

위 실장은 이번 방한이 APEC 정상외교 일정의 연장선에서 이뤄지는 만큼 양국 간 현안을 점검하 고 향후 협력 로드맵을 점검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 고 부연했다.

구체 의제·장소·시간표, 공동성명 채택 여부 등은 한미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확정되면 공개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방한 기간 국내 정치 일정과의 충돌을 최소화하고, 주한미국대사관과 경호·교통·언론 안내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